靑, 결국 포기…정치협상 제안 여전히 유효

■ 전효숙 임명안 철회…교착 정국 '숨통' 트이나

한나라 '버티기' 완승 협상 참여는 부정적

청와대가 지난 8월 16일 지명 이후 석달 넘게 정치마비상태를 초래해 온 전효숙 헌법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전격 철회함에 따라 경색될대로 경색된 정국이 해소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청와대 발표 직수 '만시지탄'이라는 짤막한 논평을 낸 것 외에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있는 입장이어서 당장 정국의 물꼬를 트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가)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면서도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던 취지와 정신은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로써 3개월 여를 끌어 왔던 전효숙 내정자 사태는 '청와대의 완패'로 종결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날 저녁 "본인이 철회를 요청했다"며 180도 돌아선 것이다.

윤 대변인은 "국회가 표결처리하길 원했던 것은 사실인데 아마 전 지명자께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고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 것 아니겠냐"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서야 전 내정자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지만 이병완 비서실장은 전날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면서 "전효숙 내정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고, 이미 지난 25일 당정청 고위급 4인 회의에서도 전 내정자의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가 전 내정자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윤 대변인은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윤 대변인은 "오늘 철회했는데 당장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겠냐"고 말했지만 애초 호남출신으로 전 후보자와 함께 헌재 소장 후보에 올랐던 이강국 전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던 손지열 전 대법관도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편 '버티기'로 정치적 완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철회 소식에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참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진작부터 위헌시비, 중립성 시비, 자질 시비가 제기된 전 후보자 문제는 자진사퇴나 노 대통령의 지명철회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기력을 시인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국정 혼란을 피하고 파행 국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결정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에 사실상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고 자책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물리력으로 국회 활동 막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편하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당은 국민들이 신뢰할 때까지 백번 천번 무릎을 꿇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제안한 당·정·청 정치협상회의 거부를 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 정면충돌로 가나 與지도부 靑 만찬회동 거부 파장

열린우리당 비대위와 상임고문단이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만찬회동 제안을 일거에 거절했다.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와 한마디 협의 없이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는 것이 거부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칫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금년말, 내년초 정계개편 논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청이 '마이웨이'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인상마저 준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오늘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 비상대책위원 전원과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겠다는 뜻을 알려왔지만, 김근태 의장이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40여명을 불러서 현 정국상황과 관련해 토론하자고 하는데 제대로 토론이 되겠느냐. 일방적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한 자리라면 안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주 초부터 4차례에 걸쳐 청와대 측에 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 처리를 진솔하게 협의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번번이 무시당했다는 것이 김 의장측의 설명이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는 이날 김 의장의 공개 언급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앞으로 당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당정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당이 국정운영을 최종 책임지는 만큼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당의 분명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향후다.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 악화는 예정된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청간 정면충돌은 국정운영의 난기류로 이어질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로코 근무했던 신국호 전남도 자문대사 인터뷰

"박람회 유치 대통령 특보 신설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교력 강화와 실리 외교가 급선무로 꼽혔다.

광주일보는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신국호 전남도 자문대사로 부터 엑스포 유치 성공전략을 들어보았다. 신 대사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마감 결과 한국(여수)과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로코와 인접국인 가봉, 아프리카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수년간 근무해 모로코 사정에 밝다.

-2012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부 차원의 외교력 강화가 우선이다. 여기에다 최대 경합국으로 꼽히는 모로코에 대한 상세한 연구도 병행돼야 하고 경제와 과학기술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지 유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교력 강화를 가장 큰 관건으로 꼽았는데.

▲엑스포 유치 성공의 열쇠는 외교력 강화에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외교채널을 풀가동해야 한다.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등의 민간 위원 등을 상대로 유치전을 전개한다. 그러나 엑스포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회원국 정부의 의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엑스포 개최권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BIE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 외교채널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오지철 전 문광부차관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대통령 특보로 임명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모로코는 강력한 맞수 외교채널 풀가동해야"

▲국가적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엑스포 유치는 BIE 회원국인 정부 대표의 투표로 정해지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대통령 특보를 신설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교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야 하나.

▲아프리카와 이슬람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로코의 벽을 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우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개발도상국 및 후발국에 대한 원조를 늘려 지지를 유도하는 실리외교를 선택해야 한다.

-모로코는 어떤 나라인가.

▲국왕 모하메드 6세가 즉위한 후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모로코는 인종적으로 아랍계, 종교적으로 이슬람권,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 속해 다양한 지지국을 확보하고 있다. 또 1956년까지 프랑스의 보호령이었기에 불어권 국가들과도 유대감을 갖고 있고, 전통적으로 온건한 친서방 군주국으로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등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수 있는 외교적 저력이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모로코의 단단한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나?

▲모로코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국가간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들이 무조건 모로코를 지지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야 한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한국이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한국은 경제력과 과학기술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참가국들에게 좀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1988 올림픽, 2002 월드컵 같은 대규모 행사 개최시의 저력을 살린다면 엑스포 유치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신국호 자문대사 약력

▲ 1950년 나주 출생 ▲ 1974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1974년 제8회 외무고시 합격 ▲ 1980. 2. 주 모로코 대사관 서기관 ▲ 1984. 7. 주 가봉대사관 서기관 ▲ 1986. 6 주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 ▲ 1999.8. 주 상하이 총영사 ▲ 2006. 8~ 전남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전남도 서남권 개발 태스크포스팀 가동 朴지사 지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발표와 관련, 도 차원에서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27일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서남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별 SOC, 투자계획, 각종 법률제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TF팀을 가동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전남도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가진 서남권 발전 종합구상 보고회에서 무안·목포·신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개발 구상', 해남·영암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 무안 기업도시 등을 연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